

社說

부패로 얼룩진 청백리 정신

지난 6일 대검에서는 96년 한 해 동안의 사건 처리 결과를 수록한 '종합 심사 분석 보고'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데, 95년에 비해 27.9%(3천8백87명)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직권 남용죄는 무려 93.5%(2천67명)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민정부 초기에 불어닥친 사정 바람으로 다소 줄어든 공무원 범죄가 정권말기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하여 다시 이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청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권력과 재물에 타협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료층의 부패는 현재에 이르러 정치·경제·사회 전반적인 부패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나라의 이미 뇌물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얼마전 한 매스컴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건축, 환경, 세무 등과 관련된 공무원 중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30%, 주면 받는다는 사람이 40%, 그리고 30%가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니 공무원 사회에서 뇌물은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관료직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청백리 정신이었다. 그러나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현재의 공무원들에게 있어 이러한 청백리 정신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사정의 한푼이 불면 잠시 목을 움츠리고 있다가 다시 우후죽순처럼 일어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사정의 칼날보다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 과 같은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편의주의 학사행정 유감

올해들어 우리학교는 학부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여기에 따라 교과과정과 이수학점 등의 학사과정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가해졌다. 또한 지난 95년 대학종합평가에 대비하여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행하였던 교과과정의 변동 폭도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양교육과 폭넓은 학문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두번의 대폭적인 교과과정의 개편의 와중에서 재학생들이 겪는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수강신청과 현재 진행 중인 수강신청 조정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복수전공과 부전공, 전공과목의 이수구분 변동 등에 관련된 상세한 지도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올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다.

현재 4학년들은 올해 들어 달리 적용되는 졸업사정 기준에 일괄 적용을 받게 된다는 수업료의 지도로 인하여 전공과목의 수강을 대폭 늘이거나 졸업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이 문제가 관련 학생들의 항의 등으로 불거져 나오게 되자 오히려 수업료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발뺌을 하고 있다. 또한 졸업사정에 있어 이러한 혼란은 매년 제기되어온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식의 학사행정이 되풀이 되어 왔다.

교직원들의 이러한 모습은 행정편의 위주의 일처리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학사 행정에서의 혼란은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겪는 혼란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학사행정을 펴나가야만 한다.

또한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대학교육은 오랜동안 굳어져 왔던 관행을 버리고 서비스라는 개념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시론

언론이 공안정국 만든다

바로서는 언론 만들기

안보위기 부각되면 모든 비리 무마
올바른 여론 위해 국민이 나서야

김 유 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

작년 이맘때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다. '김정일의 본처'가 서방으로 탈출했다는 거였다. '신문에도 풀이 있다'고 자랑하는 한 일간지의 특종으로 시작된 이른바 성혜림 사건은 언론사들의 치열한 특종경쟁을 불러일으켜 온갖 추측보도가 난무하게 된다. 언론들은 성혜림 당장이라도 한국에 올 듯 기사를 쓰는가 하면 그녀의 '탈출' 배경이 된 북한의 상황을 '궁중사극'으로 극화하여 흥미롭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도 김정일의 본처다, 전처다, 아니다 동거녀일 뿐이라는 등 추측이 쏟아져나왔다. 이미 중년을 넘긴 그녀가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의 사진이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려 독자의 흥미를 자극했다.

침착한 보도자세 필요

당시 언론의 보도태도라면 지금쯤 그녀는 한국에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나 세계적 특종이라고 자랑했던 그녀의 망명 보도는 몇개월 후 오보로 밝혀지고 말았다. 그녀는 처

음부터 망명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스크바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의 호들갑에 당당히 북한이 당장 붕괴될 듯 흥분했던 우리 모두가 우스운 꼴이 되었다.

1년이 지난 후 다시 우리는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소식을 접하게 된다. 성혜림 사건과 달리 그의 망명은 확실한 사실로 보이며, 더구나 북한 사회에서 그의 지위가 성혜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물급 인사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틀림없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 태도는 조금도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그의 망명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남북 관계에 가져올 파장을 고려한 침착한 보도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또다시 대두되는 색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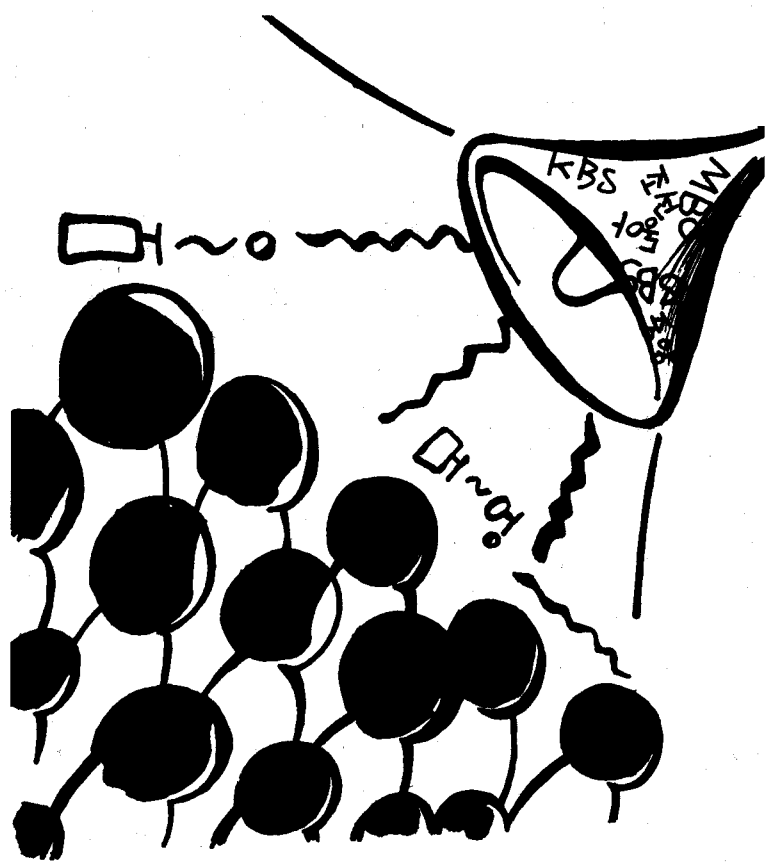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의 이같은 보도 태도가 공안정국 조성에 적극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황제 망명과 관련,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 몇가지 의혹을 제시하고 이를 발판 삼아 요구하자 언론은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황제의 망명 자체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안기부가 개입했으리라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

다. 따라서 야당이 이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의무이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야당이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안보의식이 의심스럽다는 등 비난만 하고 나섰다.

공정한 언론 부재

그러나 정작 안보문제를 악용하는 것은 언론 자신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언론은 '남한에 5만명의 간첩이 활약하고 있다'는 황제의 발언을 사실확인도 없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고, 성혜림씨 조카 이한영씨가 살해되자 이를 간첩의 소행으로 단정,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안보위기 보도가 한층 가열되는 가운데 날치기 개악과 한보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외면했으며 한보비리 수사는 호지부지 마무리되었다. 더욱이 개악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처리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4단계 총파업은 언론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버렸다.

우리는 정치적 격변기마다 안보 문제가 정권에 악용되는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안보위기'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황장엽 망명과 관련한 실재를 빌미로 조성된 공안정국이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



정, 대통령 선거등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역량 회복돼야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안보문제가 정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 견제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에 대한 이런 기대는 우리의 바람에 그칠 우려가 크다. 오히려 정부보다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공안정국을 주도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언론이 안보문제를 선정적으로 확대 파장해 사회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예로 든 성혜림 사건이 그렇고, 가깝게는 한총련 연대 사건과 잡수함 침투사건이 그렇다.

다양한 관점의 비판이 존재하고 이것이 공론화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비판세력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비판 장이 되는 언론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과 금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온 나라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도, 안보 위기만 부각하면 모든 비리가 무마되고, 비판세력이 오히려 정권과 언론에 의해 매도당하기 일쑤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언론을 감시하고 스스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공안정국에 휘둘리는 어리석음을 벗지 않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PC통신원 인간복제...진보인가 파멸인가
부작용 최소화 위한 사전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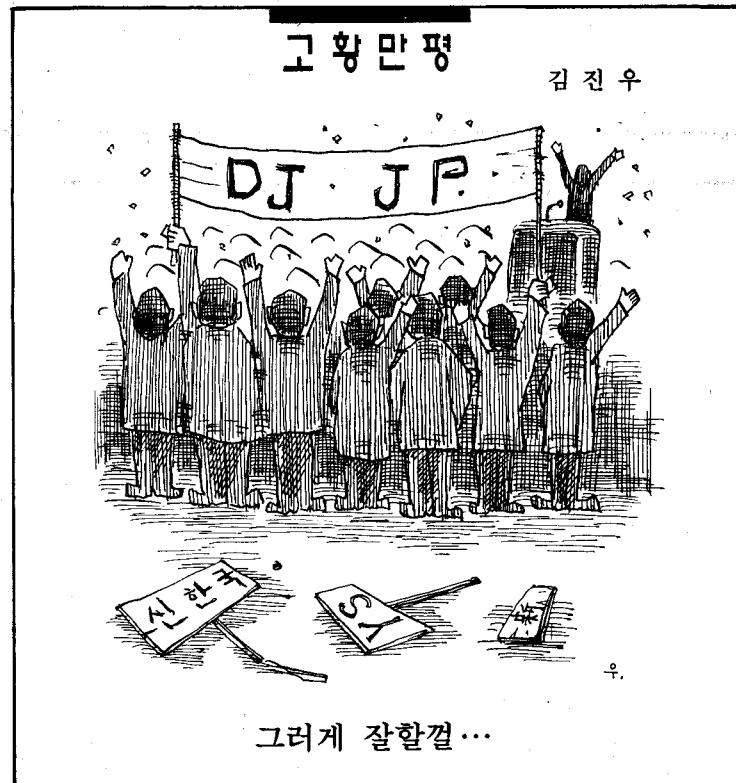
며칠전 미국에서 원숭이의 복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이로써 공상적이었던 '인간복제'가 어느 정도 현실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복제에 생겨날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하이텔 게시판에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인간복제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문제는 과학의 진보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ID: magie) 또한 복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므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과(ID: tkmaloo), 복제인간의 장기를 이식받을 때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필요한 장기만 부분생산하면 어떠한지 의견도 있다.(ID: pascalol) 복제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로 좌악시되는 부분은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해 이단으로 몰린 것처럼 과학의 기준은 종교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ID: frankyol).

이와는 반대로 한참 논란이 많은 복제인간의 '장기이식'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이 과학의 발전보다중요하다는 주장이있다.(ID: kangju) 또한, 아무리 부작용을 예방하고 문제점을 체크하여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나타난다면 사회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각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ID: iss1111)

이에 덧붙여 개성의 획일화, 인간의 제분화, 실패한 복사체의 처리방안, 복사체를 인간으로 볼 것인지 생산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배제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ID: 11470)

'인간복제'가 인류의 미래에 더 편한 삶을 약속할 것인지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지는 성급히 판단할 수 없으나 과학의 진보와 인간의 존엄성 사이에서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찬반을 떠나 공통된 목소리였다.



그러게 잘할걸...

동부그룹에는 미래를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철강·화학·전자·통신·건설·유통·금융·보험



보십시오. 제대로 보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큰 안목과 혜안을 가져다 줍니다.
틀에 박힌 시각으로 바라보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십시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사물, 꿈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색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 예리한 관찰력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동부제강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발상, 새로운 기술로
미래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동부제강